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토크아보기

주소 부산시 수영구 광남로88 301호
 전화 051-802-0916
 홈페이지 www.bssimnet.or.kr
 이메일 buun1@hanmail.net

• 문서번호	지역언론토크아보기 2021-019
• 수 신	각 언론사 보도국, 편집국
• 발 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제 목	[지역언론토크아보기] '국정원 불법 사찰' 박형준 시장 연루, 지역언론은 공방보도 말고 진실규명에 힘 보태라!
• 날 짜	2021년 7월 14일

‘국정원 불법 사찰’ 박형준 시장 연루, 지역언론은 공방보도 말고 진실규명에 힘 보태라!

지난 7월 6일과 8일, MBC 뉴스데스크는 <박형준 '4대강 반대 인물' 보고에 이명박 "잘 관리하라">(7/6), <"지지도, 보고도 없었다"...박형준 '거짓 해명' 수사 변수로?>(7/6), <"불법 없다, 첩보원 문건"...박형준 엄호 나선 국민의힘>(7/8) 보도를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MB정부 청와대 홍보 기획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국정원 불법사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사찰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후속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궐선거 때부터 불거진 박형준 시장의 '국정원 불법 사찰 개입' 의혹 제기에 박형준 시장은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일축해 왔고, 부산시장을 감시해야 할 부산지역 언론의 선택은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문건이 공개돼 다시 '진실' 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장의 불법사찰 개입'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매체	제목
KBS부산	보도 없음
부산MBC	보도 없음
KNN	보도 없음
국제신문	박형준 불법사찰 관여 의혹 문건 진실 공방(7/9, 5면)
부산일보	취임 넉 달째 박형준 시장, 재선 가도에 잇단 악재(7/8, 6면)
	여 "개입 증거" VS 야 "정치 공작"...'박형준 사찰 문건' 진실 공방(7/9, 5면)
	與,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7/9, 온라인)
	민주당 '4대강' 관련 박형준 고발...박형준 "정치 공작"(7/14, 5면)

<표 1> MBC보도 이후, '박형준 시장 불법사찰 관여' 지역언론 보도

공영방송인 KBS부산은 박형준 시장 불법사찰 관여 의혹과 관련해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 부산 시민사회의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인정, 요즈마 펀드 의혹 고발, 박형준 시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에서 의도적으로 '불법사찰'을 누락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요즈마 펀드 관련 부산시-시민단체 공방 가열>(단신)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불법사찰'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KBS부산 보도를 보는 부산시민은 박형준 시장의 '4대강 반대 인사 불법사찰 관여'와 관련해 국정원 문건이 새롭게 발견된 사실도,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알 수 없었던 셈입니다.

KNN 뉴스아이는 <"불법사찰·요즈마 펀드 관련 박형준 사퇴해야">(7/8, 단신)를 통해 부산 시민사회의 기자회견을 전하며, "4대강 반대 인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연루 사실이 최근 국정원 감찰 보고서에 담긴 것"이라 최근의 정황을 간략히 전했습니다.

박형준 불법사찰 관여 의혹 문건 진실공방

<p>정보위장 "朴, MB에 결과 보고" 시민단체 "당장 시장직 사퇴" 野 "첩보 수준...팩트 근거 없다"</p> <p>박형준 부산시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면서 진실 공방이 첨예해지고 있다.</p> <p>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은 선거 기간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의혹에 '지시도 보고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해왔지만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조치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장 부산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p> <p>민주당 부산시당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시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불법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사찰 인물들을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p>	<p>확인되면 박 시장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국회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거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상자를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이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6월 4대강 반대 인사 20명을 선정해 특별 관리하겠다고 박형준 당시 홍보기획관에게 보고했고, 박 기획관은 같은해 7월 4대강 반대 인사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p> <p>그러나 8일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문서가 정보나 첩보 수준으로, 명백한 '팩트'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도청·미행 등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도 없었다"고 반박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정유선기자 freesun@kookje.co.kr</p>
---	--

<그림 1> 박형준 시장 불법사찰 관여 보도 (국제신문, 7/9, 5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두 신문 모두 이번 문건의 '신빙성'에 주목해 정치권의 공방을 전했습니다. 국제신문 <박형준 불법사찰 관여 의혹 문건 진실 공방>(7/9, 5면)과 부산일보 <여 "개입 증거" VS 야 "정치 공작"...'박형준 사찰 문건' 진실 공방>(7/9, 5면)는 "진실 공방이 첨예해지고 있다.", "해당 문건 신빙성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 변지는 분위기다."고 전하며 여·야 정치권의 주장,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을 주요하게 전했습니다. 공방만 오갈 뿐, 문건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 취재는 없었고 불법사찰 사안의 당사자일 수 있는 시민사회 목소리는 한 줄 처리했습니다.

부산일보는 <취임 1년 달째 박형준 시장, 재선 가도에 잇단 악재>(7/8, 6면)에서 '불법사찰', '요즈마펀드 의혹', '엘시티 공익 환원 진정성' 등을 언급하며 타 지역언론보다 적극적 보도를 보여줬지만, 이 모든 사안을 박형준 시장의 재선과 연결해 '악재'라 단정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4대강' 관련 박형준 고발...박형준 "정치 공작">(7/14, 5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이번 사안을 대선국면을 앞두고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을 공략하기 위한 여권과 국정원의 정치공작으로 규정"한다는 반박입장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여 “개입 증거” vs 야 “정치 공작”... ‘박형준 사찰 문건’ 진실 공방

‘MB에 직접 보고’ 국정원 문건 공개 정보위에서도 진위 싸고 치열한 공방 민주당 부산시장, 사법당국 조사 촉구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핵심 쟁점 떠올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2009년 7월 청와대 홍보기 확산 시점 국가정보원의 4대강 반대 인사들에 대한 사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문건 사찰비 문건” “정치 공작”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8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선 논란이 벌어졌다. 박지열 국정원장은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해당 문건을 ‘명백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뒤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박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이 첩보와 정보를 취급하는 곳인데 (박 시장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백트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지는 질의했고, 이에 대해 (박 원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정보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보고서가 유출되거나 공개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정원에 4대강 관련 건을 조사한 것 자체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맞다”고 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과 관련된 요즈마그룹의 실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실로 확인된다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불법 사찰 연루 의혹 제기 등에 대해 ‘관련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일관되게 부인한 박 시장은 관련 재판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정치적인 책임도 불기피하다. 박 시장은 해당 보고서 내용에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약이 전혀 없는데, 정채 불명의 문건을 들고 나와 뒤집어짜우려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문건의 신빙성 문제, 즉 증거로서 효력이 있느냐 여부는 결국 관련 재판이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법원의

법정국의 합제헌 수사를 촉구했다. 9일부터 시작 되는 부산시의회 제28회 임시회에서도 ‘불법 사찰’ 진실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는 21~22일 이틀간 진행되는 시장질문을 통해 박 시장을 답변대에 세워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적폐청산 시총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반대 인사 사찰 등과 관련해 박 시장 사퇴를 촉구했다.

요즈마는 유명 회사? 실제 싸고 정면 충돌

1조 2000억 펀드 조성 열쇠 쥔 그룹 시민연대-여당 ‘실체 없다’ 의혹 제기 부산시 “사실무근... 운용 경력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 공약인 ‘요즈마 그룹’의 글로벌 펀드 조성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요즈마 그룹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부산시와 업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공약과는 무관한 부산시의 펀드 조성 정책이다. 요즈마의 투자 계획을 얹어 1조 2000억 원대의 펀드 투자를 유치한다고 선전할 것은 ‘선거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등은 8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즈마 그룹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즈마 그룹의 총공-싱가포르 지사는 실체가 없다고 알려졌다”며 “1993년 이스라엘이 국책 사업으로 요즈마 그룹 펀드를 5년간 운영했지만 이후 민영화되면서 2013년 모든 펀드를 청산했고, 현재는 본사 직원 3명만 남아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역시 성명을 통해 요즈마 펀드 실제 의혹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의대환

세금을 투입하면서 급하게 처리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부산시가 회사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협약을 진행한 것은 불분명한 도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요즈마 그룹은 실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했다. 요즈마 그룹측에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부산시 역시 “국내에서 1869억 원 규모의 투자 조성을 결성해 운용한 경력이 있다”며 “요즈마 그룹과 체결한 MOU(업무협약)는 포괄적 협력을 명시한 것으로 시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박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2025년까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창업 펀드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후보 시절 강조했다던 것과 달리 요즈마 그룹이 부산의 창업 펀드 조성에 얼마나 역할을 해 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요즈마 그룹측에서는 기술특화펀드라는 이름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산에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펀드는 요즈마 측의 자체적인 계획으로 부산시가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수단은 없다. 박 시장 취임 직후 부산시와 요즈마 그룹이 체결한 MOU 역시 3000억 원 규모의 기술특화펀드와 무관하다.

인준영 기자 injun@kbs.com

<그림 2> 박형준 시장 불법사찰 관련 보도(부산일보, 7/9, 5면)

‘국정원 불법 사찰’은 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게다가 부산시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언론은 또 다시 단순 공방보도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에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요. 취임 100일을 앞두고 부산 시민사회는 여전히 박형준 시장의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끝>